

# 문화·관광·체육계 지원 최선

### 도, 코로나19 여파 위기 극복 위해 임금보전·인건비 선지원 등 다양한 선제적 조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축제와 체육행사,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문화·관광·체육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상황 조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도내 각 시군이 3~5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 25개 중 취소 8개, 연기 7개를 비롯해 10여 개 축제도 검토 중에 있어 불철 관공객 유입이 어렵고, 대규모 체육행사와 공연도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문화·관광·체육계 전반으로 번짐에 따라 전북도가 피해상황 조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도는 19일 도내 문화·관광·체육계가 처한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임금보전, 인건비 선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도내 모든 작은도서관에 책소독기 비치 등을 긴급히 진행하고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및 주요 예술단체 방문을 통해 피해상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예술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대상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모두 250명(2019년 138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예술인파견지원사업으로 기업·기관의 협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 30명(2019년 25명)에게 임금보전으로 월 120~14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202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응모했으나 지원하지 못한 예술단체·예술인에 대해서 일선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지원 예산(1.5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관광·체육 종사자 등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를 선지원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문체육강사 등 체육지도자, 문화재돌봄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의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사업 등 총 4개 사업, 45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 밀착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비 3억8,6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책 소독기를 도내 모든 공·사립 작은도서관 322개소에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예방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42억),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7억), 음식점 시설개선사업(15억)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계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현재 체육회에 입주 중인 4개소(커피숍, 미용실, 음식점, 편의점) 상가를 대상으로 월 20%의 임대료를 3개월(3~5월)동안 인하하고, 체육시설 2개소(헬스장, 스퀘시장)에 대하여는 시설폐쇄로 수입이 전무한 상태여서 임대료를 3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창업·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현재 진흥원에 입주 중인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월 35%의 임대료를 4개월(3~6월)동안 인하 입주기업과 기관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 도, 다중밀집시설 방역실태 야간점검

전북도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현지 야간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밀집시설 영업장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지 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사람들이 술마시고 춤과 음악이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시·군 관

련 부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장 방역실태 현지 점검은 물론 소독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행동요령 홍보물 배부 등의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고위험시설의 위생관리 물품(손, 살균소독제 등) 비치 여부, 관할 시·군이나 협회에서 배포한 감염병예방수칙, 행동요령 등이 영업장 내 게시 여부, 영업장 종사자 손님 응대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농촌·농업인단체 등에 코로나19 방역용품 긴급 지원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도내 농촌·농업인단체 등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을 긴급 지원했다.

전북도는 영농철에 다수의 농업인이 방문하는 농업인단체 등 다중이용시설과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조기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전북 농업인단체 시군지부 210개소 건물에 바이러스 예방요령 홍보물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구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인단체별 150개씩 2,800개를 배부했다.

앞선 지난 2월 초부터 도는 농업 관련 도내 다중이용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137개소, 농협 하나로 마트, 수협, 농

산물 유통판매장 등에 손 소독제 비치 등 매주 점검하고 행동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런 도의 노력에 농업인단체 연합회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화답했다. 연합회는 지역농업연구원 등 입주업체 4개사에 3개월 동안 임대료를 30% 감면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김진성 기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용역 착수

### 전북도, 국토부에 6개 사업 15조2000여억원 반영 건의... 선제적 대응 나서

내년에 확정되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6개 사업, 15조2천여억원 반영을 건의한 전라북도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 비전과 목표, 투자규모 및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2021~203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

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2월 발주한데 이어 최근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사)대한교통학회와 (주)유신이 맡았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 전주~김천,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

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도 병행해 새만금 지역에 항만·공항과 철도 수송체계를 갖춘 트라이포트를 완성함으로써 새만금의 기업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 의견을 반영해 6개 사업, L=645.3km, 15조 2,463억원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 "50조원 규모 특단 비상금융 조치 결정"

### 문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 발언...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기를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능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는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탁,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

리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가 조치 마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재정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